

육아정책 소식

교육부 2014년도 예산안 54조 3,661억원 편성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9월 26일(목) 보도자료에서 행복한 교육, 창의성을 갖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2014년도 예산안을 전년도 53조 8,264억원에서 5,397억원 증액한 54조 3,661억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2014년도 교육분야 예산안은 전년도 8조 5,676억원 대비 7.9% 증액된 9조 2,525억원을 반영하였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전년도 41조 2,286억원 대비 2,303억원 증액한(0.6%) 41조 4,589억원을 편성하였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활용하여 주요 정책과제인 3~5세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중학교 자유 학기제 도입,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등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교육 정상화에 우선 투자할 예정임을 밝혔다. 유아단계에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13년부터 3~4세까지 확대·적용한 누리과정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도 보건복지부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그간 보육료 및 교육비 신청을 받아오던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를 새롭게 확대 개편하여 10월 7일(월)부터 여가부의 "아이돌봄서비스"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하였다. 다만, "아이돌봄서비스"의 온라인신청은 맞벌이부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로서 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한하여 가능하다. 아울러,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단지 정부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것이고, 대상자 선정 후 서비스 이용신청은 기존대로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진행해야 한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0월 17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11월 8일부터 부산, 제주에서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이란, 기존 어린이집 원장이 수기대장으로 관리하던 입소대기자 명부를 온라인으로 공동 관리하는 것으로, '14년 상반기 중 입소우선순위가 적용되는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직장, 부모협동 제외)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본 시스템이 도입되면,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부모가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하고, 대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과의 연계로 우선순위 증명을 위한 일부 준비서류가 간소화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본 시스템 도입을 통해 투명한 대기자 관리로 어린이집의 입소우선순위 미준수 및 맞벌이 가구 자녀 등에 대한 입소거부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주요내용 〉

-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 공개
 -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 ▲기본현황(시설,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 직종·자격별 현황, 영유아 현황 등) ▲보육과정(연간 보육계획안, 특별활동) ▲보육비용(행사비, 차량운행비 등 필요경비 최대 금액) ▲예·결산(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 ▲안전·건강·영양(급식관리 현황, 환경안전관리), ▲통학차량 운영현황
 - 공개 주기: 수시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월/연간 단위로 변동하는 사항은 월/연간을 주기로 공개
 - 아이사랑보육포털 내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one-stop으로 공개되며 모바일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법 위반 어린이집 및 원장·보육교사 명단공표**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운영정지·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과 아동학대로 자격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원장·보육교사 명단 공표
- 지자체·복지부·보육관련 기관 홈페이지와 아이사랑보육포털 내 정보공개 시스템에 공표될 예정임

-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확대·개편**

-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장난감 대여 등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을 지원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관한 정보 공개로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모 선택권을 확대하고, 신뢰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 종합지원 인프라 구축으로 효율적 전달체계 기반을 확립하고자 한다.